

# 포스트모던네이비(Post-Modern Navy) 도약을 통한 미래 해군력 건설 방안

이해구<sup>1</sup>, 김태호<sup>2\*</sup>

서애류성룡함 작전관<sup>1</sup>, 서애류성룡함 전투정보관<sup>2\*</sup>

## ROKN Future Development Planning by Accepting Post-Modern Navy

HAEGU LEE<sup>1</sup>, TAEHO KIM<sup>2\*</sup>

**Abstract** : 오늘날 국제정치의 대표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는 신(新) 보수주의는 국익 중심의 전통적 동맹질서 재편성을 특징으로 한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엄중한 한반도 정세 속에 정증하는 주변국 위협,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 속에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현재는 한미동맹 강화가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 국가적 생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며 이를 위한 미래 해군력 운용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신 보수주의 흐름 아래 우리 해군은 포스트모던네이비로 도약해야만 비로소 이러한 국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네이비란 자국의 이익만 대변하는 해군이 아니며, 동맹국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해군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북한과 주변국 위협 대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대한민국 해군은 Up-Gunned ESG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전력 건설이 이루어져야 하며,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시스템 운용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현재 産·學·研 간 추진중인 다양한 노력을 총 결집하여야 하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SMART NAVY 구현일 것이다.

**Key Words** : 신 보수주의, 국익, 한미동맹, 국가 생존성, 인도·태평양전략, 한반도 안보, 확장억제 신뢰성, 포스트모던네이비, 4차 산업혁명, SMART NAVY

### 1. 現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환경

오늘날 국제정치의 대표적인 흐름은 한마디로 미·영(美·英) 주도의 신(新) 보수주의(New-Nationalism)라 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영국 브렉시트(Brexit)를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미국 내 부(富)의 불평등 문제’와 자유주의자(Libertarian) 주도의 세계화, 그리고 확장개입주의(extensive interventionism)에 대한 반대를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우리는 지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금융 시스템 질서를 주도해 온 미·영 양국이 이 새로운 흐름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흐름은 그저 지도자 성향에 의한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도 이에 대한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신 보수주의는 과거와는 달리 자국의 이익 극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sup>1)</sup> 따라서 향후 국제사회는 국익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동맹질서 재편성의 양상을 보일 것이다.<sup>2)</sup>

물론 국익 중심의 이러한 모습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제한개입 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해외 주둔 미군 철수로 불필요한 재정 소요를 감소하며 “피주둔국의 반미감정 최소화”로 미·중 패권경쟁의 힘을 비축하겠다는 의도인데<sup>3)</sup>, 이처럼 국가간 동맹 관계는 국익이라는 잣대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최근 美 하원 군사위원회 의 국방수권법 초안에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 삭제된 바 있는데, 우리는 주한미군이 언제까지나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假定)을 경계해야만 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우리에게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격화되는 미·중 간 무역전쟁 속에 미국이 지난 6월 1일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한 데 이어 중국은 해군의 SLBM 발사시험을 함으로써 무언(無言)의 시위를 한 바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대사(無言)는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은 환구시보를 통해 대한민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동참키로 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5월 말 대형 호위함인 가가함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실시한 가운데 자국 함정이 지역 공공재(公共財)로써 미일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국가적 생존성 보장을 위한 북한 비핵화다. 일반적으로 ‘핵’에는 ‘핵’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핵 무장 카드를 꺼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로 최소한의 국가 생존성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그동안 한반도 중심의 국익을 추구해 온 대한민국과 세계를 무대로 한 미국의 국익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중 패권경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또는 유사시 조기 전승(戰勝) 달성이라는 대명제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한다. 어쩌면 이제 우리의 군사전략이 기존 한반도 전구 중심을 뛰어넘는 더 큰 수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모른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 있기도 하다.

### 2. 포스트모던네이비로의 도약

#### 2.1. 美 인도·태평양 전략의 함의

2018년 1월, 美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요약본에 이어 지난 6월 1일에 공개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왜냐하면 이제

1) Kori Schake. “Will Washington Abandon the Order? The False Logic of Retreat.”  
2) Joseph S. Nye, Jr. “Will the Liberal Order Survive? The History of an Idea.”  
3)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미국은 본격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전략적 중심으로 설정한 가운데,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패권 추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향후 미·중 간 패권경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 안보에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세계적 신 보수주의 흐름 속에서도 한미동맹 강화를 추구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美 인도-태평양 전략서에 제시된 3대 세부 추진 전략 중 ‘동맹 강화 및 파트너십 확대’ 분야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상대가 원하는 바를 알아야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법이다.

첫째, 미국은 중국과 대치함에 있어 동맹국을 활용하고 그들이 가지지 못한 비대칭적 이점을 얻고자 한다. 이는 지난 6월 3일 한·미 국방부장관 사이에 결정된 미래연합사령관 및 육군 구성군 사령관의 한국군 임명과 해군·공군 구성군 사령관의 미군 임명 합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둘째, 미국은 동맹국과 상호운용성 심화를 통해 강화된 파트너십 구축을 원한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상호 연동성 강화 분야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상호 이익에 부합될 것이다. 셋째, 미국은 핵심 동맹 및 동맹국 간 안보 파트너십의 장기적 지속을 추구한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미국의 핵심 동맹임을 확신할 수 없다면 미국에 우리의 비대칭적 이점만 제공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 비핵화 뿐 아니라 동북아 군비경쟁 과열로 인한 주변국 위험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의 국익 확보를 위한 능동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는 한반도 전구를 넘어선 시각으로 미래전략을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대(對) 한반도 기조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 2.2. 국가 생존성 보장을 위한 해군의 가능성

미국은 2001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sup>4)</sup>를 통해 ‘전략적 핵 억제 개념’ 기반의 핵전략을 내세우며 이를 위한 재래식 정밀유도무기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당시 제시된 핵 억제 3요소는 ‘① 핵 능력’과 정밀유도무기 바탕의 ‘② 능동적·수동적 방어’, 그리고 국가 제요소로 이를 뒷받침 할 ‘③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이다. 이 중 ②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재래식 전력도 핵 억제의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을 이른바 ‘유연반응(Flexible Response)전략’이라 부른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은 결국 유연반응전략 구현을 위한 ‘능동적·수동적 방어능력’의 확보 조치라 하겠다.

그러나 ‘핵 능력’이 없는 이러한 조치는 핵 억제의 실현을 위한 완전한 방안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보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타국의 확장억제 신뢰성 확보 방법은 최근 유럽연합(EU)의 전략적 선택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폴란드와 체코가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미국의 대(對) 이란 탄도탄 방어 전략자산 배치를 용인한 것은 미국의 대(對) 러시아 확장억제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맹국과의 상호 이익 공유를 통한 국가 안보의 안정적인 관리 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준다. 필자는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지향적인 활용 가능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美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해관계를 잘 활용함으로써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그들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주변국

위협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사적 관점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전력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해군력일 것이다.

## 2.3. 포스트모던네이비 도약의 당위성

우리 해군에게는 ‘대양해군’이라는 익숙한 슬로건이 있다. 이는 마한(Alfred T. Mahan)의 ‘함대결전’ 사상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엄중한 한반도 안보 환경을 고려한다면 이제 우리도 코르벳(Corbett) 중심의 해양전략 사상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는 해군력이 포함된 해양력을 어떻게 운용함으로써 지상전(地上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하고 그 결과 전쟁의 최종상태는 ‘완전한 적(敵) 격멸’이 아닌 ‘적의 항복’으로도 달성됨을 도출하였다. 이른바 ‘제한전(limited war)’의 개념인데, 이러한 간접적 접근론은 현재 미국 등 주요 해군에도 적용되어 오늘에 이른다. 여기에서 우리 해양전략의 사상적 뿌리를 코르벳으로 삼아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합동군 간 합동성 강화를 언급한 것이며, 결코 지상전 수행을 위한 하위 개념으로써 해군력 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이러한 코르벳 사상 중심의 세계 해군전략 흐름은 1990년대 영국의 해양전략가 킬(Geoffery Till)로 이어진다. 킬은 ‘바다에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 과거 해군이 관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육상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로 변화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美 해군은 걸프전 이후 신속성이 보다 더 강조된 원정작전 개념을 발전시키며 항공모함전단과 감습상륙전단으로 구성된 전력의 운용과 타군과의 합동작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한편, 체브로 스키(Arthur Cebrowski)는 C4I 체계 등 발전된 과학기술을 토대로 네트워크중심작전(NCW) 능력 강화를 주장하였는데, 당시 형성된 공강대를 바탕으로 오늘날 美 연안전투함(LCS)이 운용 중이다.<sup>5)</sup>

2000년대 이후 뮐렌(Michael Mullen)은 국가 간 심화된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동맹국 간 협력에 의한 해상교통로(SLOCs) 보호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는데, 킬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자국의 이익만 대변하는 해군을 모던네이비(Modern Navy)로, 동맹국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해군을 포스트모던네이비(Post-Modern Navy)로 구분하기에 이르렀다.<sup>6)</sup> 여기서 우리가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 강화를 위해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바로 ‘포스트모던네이비’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단일 국가의 힘 만으로는 전승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던네이비는 비단 해군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며, 대한민국 미래 군사전략의 지향점이 되어야 마땅하겠다.

1970년대 해양전략학자 부스(Ken Booth)는 해군의 ‘외교적 역할’을 통해 자국이 원하는 바를 손쉽게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마치 오늘날 포스트모던네이비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해군력을 바탕으로 “동맹관계의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여야 한다.<sup>7)</sup> 작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미래 해군력 건설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데, 필자는 그 해군력 구축의 수준이 적어도 ‘상대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정도’가 되어야

5) Elinor C. Sloan, *Modern Military Strategy—An Introduction*, (New York: Routledge, 2012)

6) Geoffrey Till, *Seapower –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Routledge, 2013)

7) Ken Booth, *Navie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Routledge, 1977)

4) NPR: Nuclear Posture Review(핵태세검토보고서)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미래 해군력 건설 방향을 다음 장에서와 같이 제시한다.

### 3. 미래 해군력 건설 방안

#### 3.1. 4차 산업혁명과 SMART Navy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1,000여 대가 넘는 드론이 군집 비행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을 것이다. 미·중·러 주요 강대국들은 이미 ‘벌떼 드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도 이러한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8년 KAIST가 인공지능 무기 개발 의뢰를 받아 전 세계적인 보이콧 사태를 경험하였듯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뛰어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만일 벌떼 드론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무기가 실현화 된다면 이는 곧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적용 분야에 있어 군(軍) 보다는 민간분야에서의 적용이 앞서 있는 듯 하다. 예를 들어 경찰은 항우연과 함께 열감지카메라와 자율탐지,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수색용 드론을 공동 개발하였으며, 지난 해 총 30대를 도입한 바 있다. 또한 항우연은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틸트로터형 무인기를 10kts로 기동하는 해경함정에서 자동 이착륙 하는데 성공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기술이 세계적인을 방증한다. 한편,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한 産·學 해양무인로봇 연구클러스터 구축 노력과 지난 2018년 11월 ERICA 한양대에서의 미래해양연구센터 개소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과 무인화, 빅데이터, 수중로봇, 인공지능의 접목을 위한 産·學·研 간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SMART NAVY 건설로 해양강국으로의 발돋움에 꾀하고 있으며, 육군의 5대 게임 체인저 제시 등 전 군(軍)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 이제 군(軍)은 상용품의 활용에서 미래 무기체계 개발에 이르기까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민·군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간의 노력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가운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의 확보와 개발에도 주도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있어 예산소요 등 현실적인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국제정세와 4차 산업혁명을 동시에 고려한 미래 해군 전력의 구축 방향은 다음과 같다.

#### 3.2. Up-Gunned ESG 중심의 신(新)전력 건설

해군력의 유지에는 타군 대비 고비용의 예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연구개발비용(R&D)와 획득비용 뿐 아닌 운용·유지비용(O&S)과 폐기비용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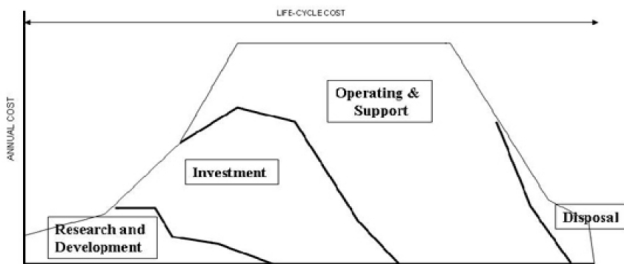


Fig. 1. 함 총수명에 따른 예산소요 비중

이를 함정 운용예산의 4대 요소라고도 하는데, 함 운용을 위한 총 예산 중 ‘운용 유지비용’이 무려 70%에서 80%를 차지한다는 점은 눈여겨 보아야 하겠다.<sup>8)</sup>

미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50년 간의 항공모함 운용에는 재래식 항공모함이 연간 약 4,000억 원, 핵 추진 항공모함이 약 5,700억 원 가량 소요된다.

Table 1. 항공모함 운용·유지비용<sup>9)</sup>

구 분		재래식	핵 추진
직 접 운용비	인건비	144 \$	162 \$
	연료비	23 \$	-
	수리비	128 \$	179 \$
	기 타	29 \$	22 \$
간 접 운용비	훈련비	5 \$	34 \$
	연료이송	14 \$	-
	핵 지원	-	62 \$
	기 타	2 \$	2 \$
함 현대화 비용		1342 \$	3,692 \$
연간 운용·유지비		372 \$	535 \$

\* 단위 : 백만 \$ (1달러=1,064원 적용, 원화 유지비용 산출)

참고로 美 해군은 국방예산 축소와 선령 노후화 추세 속에 위와 같은 문제로 과거 대비 1척이 감소된 항모감속단 11척 체제를 운용중이다. Up-Gunned ESG 개념은 이에 대한 작전적 문제점을 제한적으로나마 대체하기 위한 방안인데, 이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항공모함보다 작은 규모의 LHD급 함정에 F-35B를 탑재·운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도라 하겠다.

한편, 오늘날 동북아 국가 간 항공모함 보유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은 5만톤급 항공모함 라오닝함 배치에 이어 7만톤이 넘는 001A함 등 2035년까지 총 6척 체제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자 하며, 일본은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한 ‘방위계획 대강 개정안’을 통해 이즈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현 2척)에의 F-35B 도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 오늘날 국제관계에서의 신보수주의 경향과 지역 내 군비경쟁,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제 우리 해군도 항공모함 전력 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긴요해 보인다. 그러나 예산소요 등 현실적 관점에서 미래 대한민국 해군의 항공모함 보유가 어렵다면 그 대체 방안으로 Up-Gunned ESG 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전·평시 한반도 전구 대응 뿐 아닌 주변국 위협에 대응할 최소한의 전력이며,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심을 갖는 미국에게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커다란 지렛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래 대한민국 해군의 Up-Gunned ESG 전력에는 F-35B 뿐 아닌 ‘해상 벌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기술 운용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호위하기 위한 대공·대잠전력의 국산화 등 국가 방산능력 향상과 이에 따른 긍정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하겠다. 물론 수상·수중 드론 등 새로운 기술의 산출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구조·소해 및 지원 전력의 강화도 동시에 도모하여야 한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미래 해군의 소요는 매우 많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현재 지속 개발 중인 빅데이터나 3D 프린팅 기술 등 도입으로 불필요 재원 소요를 절감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은 미래 대한민국 해군의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기회이자 도전이다.

8) Antounucci, Kevin C. "Operating and support costs and affordability of a 324 ship Naval battle force"  
9) Navy Aircraft Carriers—Cost Effectiveness of Conventionally and Nuclear Powered Carriers (1998년)

## 4. 결론

신 보수주의에 따른 국익 중심의 국제질서 재편 흐름은 미·중 간 패권경쟁과 동북아 군비경쟁,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 등과 맞물린 우리에게 신중하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국가 생존성 보장을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한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신뢰성 확보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것이 결국 우리의 국익이 되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여기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우리의 국익이란 미·중 패권경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또는 유사시 조기 전승(戰勝) 달성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미래 군사전략은 한반도 전구를 뛰어넘어야 한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비단 과학기술계 뿐 아니라 군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혁명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전구 중심의 기존 군사전략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군이 바로 해군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위한 미래 해군력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합동성 중심의 코르벳 사상을 바탕으로 ‘모던네이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포스트모던네이비’로서의 한국형 Up-Gunned ESG 구축이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대방이 볼 때 관심을 가질 만한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하는 법이다. 이는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진행되는 해군력 중심의 군비경쟁을 소홀히 바라볼 수 없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Up-Gunned ESG 운용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할 때이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산물(産物)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진정한 해양강국 건설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논의하는 SMART NAVY의 진정한 목적이자 이유가 될 것이다.

## 후 기

사상(思想)은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이다. 그저 단순히 ‘어떠한 위협이 있으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작전적 사고방식으로는 어떠한 정책의 지속적인 추동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 현상에 대한 원인 진단이 개인별로 다를 뿐더러 이에 대한 대응방식 역시 같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국회에서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사상적 정립을 주문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에 대한 작전적 수준의 논의에만 집중하지 않았던가? 올바른 사상이 정립된다면 제아무리 복잡·다양한 환경에서도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줄지(拙著)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적 생존성 문제를 담보할 수 있을지 최근 국제관계 고찰을 시작으로 답을 얻고자 하였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요동치는 국제관계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언가 국가 차원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전투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줄 것이나, 시대 변화에 발맞춘 사상적 진화도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의 합동 군사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아니면 국가 대전략은 어떤가? 만일 오늘날이 격동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상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알 수 없다면 그것은 곧 기존 사상의 부재(不在)를 의미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었으며, 이것이 비단 美 해군, 또는 군을 위한 전략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다. 모든 학문의 근원은 철학이라는 점을 통해 유추컨대 우리 중 누군가는 군사력 운용의 기본이 될 합동군 사상적 정립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SMART NAVY 달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사상’을 기반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에 비로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기반의 Up-Gunned ESG 운용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이는 국내 産·學·研의 훌륭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의 신 성장 동력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임을 주장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 참고문헌

Antounucci, Kevin C. "Operating and support costs and affordability of a 324 ship Naval battle force", Master's Thesis of the NPS(Naval Postgraduate School), 2011, pp.3~4

Elinor C. Sloan, *Modern Military Strategy—An Introduction*, Routledge, New York, 2012, pp.101-104.

Geoffrey Till. *Seapower –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Routledge, New York, 2013, p.31.

Joseph S. Nye, Jr. "Will the Liberal Order Survive? The History of an Idea." *Foreign Affairs*(January/February), Volume 96. No.1, 2017. p.12.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Foreign Affairs*(July/August), Volume 95. No.4, 2016. pp.81-82

Ken Booth, *Navies and Foreign Policy*, Routledge, New York, 1977, pp.20-21.

Kori Schake. "Will Washington Abandon the Order? The False Logic of Retreat."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Volume 96. No.1, 2017. pp.41-46

美 의회요구 답변자료, *Navy Aircraft Carriers—Cost Effectiveness of Conventionally and Nuclear Powered Carriers*, 美 일반회계부(GAO, General Accounting Office), 1998년 p.9, pp.80 ~ 81